

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

2022. 8.

금 융 위 원 회

I. 추진 배경	1
II. 문제인식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	2
III. 제도 내실화 방안	5
1. 심사 체계 개편	5
2.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	9
3. 지원 체계 재편	11
IV. 향후 추진일정	14
[참고1]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사례	15
[참고2]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	16
[참고3] 규제개선 완료 혁신금융서비스	17

I. 추진 배경

-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'19.4월 도입 이후,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과 규제 개혁을 선도해옴
 - '22.7월말 현재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, 이 중 13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소비자 편익을 제고 (참고 1)
 - 이 과정에서 전담인력 2,052명 고용창출, 3.7조원 투자 유치 등 핀테크 산업 저변도 확대 ('22.6월말 기준) (참고 2)
 - 안정성·소비자편익이 입증된 46건 혁신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디지털 규제혁신의 환경이 조성 (참고 3)
- 다만, 제도 초기에 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* 및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 혁신동력 위축 우려가 제기
 - 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: ('19년) 77건 → ('20년) 58건 → ('21년) 50건
 - 이는 그간 시장의 누적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해 옴에 따른 것으로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
 - * 규제샌드박스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에도 도입 직후에 대비 지정건수 감소 ('17년 : 49건 → '19년 : 29건 → '20년 : 22건)
 -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,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온 주요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
- 특히, 내년부터 초기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만기가 대거 도래*하면서, 사업지속 가능성(제도화 여부)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조
 - * 특례기간은 최초 2년, 추가 2년 연장 가능 ('19.4월 지정 서비스 → '23.4월 최종만기 도래)

⇒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실화가 긴요한 시점

II. 문제인식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

1. 심사 체계 측면

□ **현행**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체계는 ‘혁신성’·‘소비자편익’보다는 ‘안정성’ 중심의 판단이 불가피한 구조

○ **민·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**(“혁신위”)*가 구성되어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자율적 판단을 담보하지 못함**

* **위원장** : 금융위원장 / **구성** : 공무원 7명, 민간위원 17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

*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「혁신위」→「금융위」를 중첩적으로 거치나 두 회의 모두 금융위원장이 주재함에 따라 민간위원의 적극적 심사에 제약

○ **사실상 조직·인력·전문성*** 등이 제한적인 금융당국 실무단의 검토 의견에 의존이 불가피

* (조직·인력) 규제샌드박스 전담팀의 인력 부족으로 해당 업권의 안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업권 담당자가 규제 특례 필요성까지 검토 → 보수적 판단 경향

* (전문성) 실무단은 법·제도 집행·운영, 정책기획에 특화되어 혁신성·소비자 편익 등 기술적·전문적 영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계

□ **심사기준 측면**에서도 ‘혁신성’, ‘소비자 편익’ 등 규제 특례의 핵심 요건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에 제약 소지

* (예) 동일·유사 서비스의 혁신성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

⇒ 전문성·객관성에 기반한 신속·과감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심사체계 개선

① **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위 구성·운영 개편**

② **실무단 심사를 지원하는 ‘금융혁신 전문가 지원단’ 설치**

③ **‘혁신성’, ‘소비자 편익’ 심사기준 명확화**

2. 제도 운영 측면

- 제도 초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모멘텀 형성을 위해 가급적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옴
 - 서비스 전면 출시·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일괄 면제(인허가+영업행위)하고 특례기간도 법상 최대기간(총 4년) 지정이 관행화
 - 이에 따라, 혁신금융서비스가 활발하게 출시되는 등 혁신 촉진의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
- 다만, 제도 운영이 지속되면서 잠재 위험 누적 및 “한시적” 특례 조치로서 제도 자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과 우려가 증가
 - 내년부터 특례기간 종료 서비스가 도래하면서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
 - 특히, 한시적 특례조치 임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영업·고용·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종료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비판
- 이는 지정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를 야기하여 위험 확인절차(테스트베드)로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 활용을 오히려 제약

* 잠재 위험 및 사업종료 리스크가 클수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부담요인

⇒ 사업자·소비자·투자자 모두가 안심하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

- ① 만기도래 이후 제도화 여부 조기 확정·통보
- ② 잠재위험에 비례한 적절한 특례 범위·기간 설정

3. 지원 체계 측면

-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체계는 혁신금융서비스 '지정 이후', '금전 지원*' 위주로 중소·예비 창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한계

*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사업자(금융회사 제외)에 대해 서비스 출시를 위한 필요 비용 중 최대 75% (사업자별로 1.2억원 한도) 지원 등

- 대다수 중소 핀테크의 경우 물적·인적 인프라 및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토로

* 핀테크 업체(빅테크·금융회사·통신사 등 제외)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/비율 : ('19) 44건 / 57.1% → ('20) 15건 / 25.9% → ('21) 6건 / 12.0%

※ 예비·중소핀테크 주요 애로사항 (13p 별첨2)

- 금융 규제체계 이해도 및 데이터 접근성이 낮아 아이디어 발굴·구체화 등 사업 준비 단계에서 애로가 많음 ⇒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체가 어려움
-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단순 금전지원 외에 금융서비스 세부 프로세스 및 규제 체계에 대한 정보제공, 금융사와의 제휴 지원 등 다각적 지원 필요

- 한편,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후 책임성 확보 소홀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→ 장기간 서비스를 미출시하는 경우 제어수단 필요

* 혁신서비스 지정~출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250일 (현재까지 출시된 135건 평균) (특히, '22년부터 특례기간 기산일이 지정일에서 서비스 출시일로 변경→ 출시 지연시 무기한 특례가 인정될 가능성)

⇒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소 핀테크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·강화하고, 지원에 대한 사후 책임성 확보도 병행

- ① 예비·초기 핀테크 지원 강화
- ② 혁신금융사업자 책임성 확보

Ⅲ. 제도 내실화 방안

1. 심사 체계 개편

① 혁신위 구성·운영 개선

◆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혁신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편

① 혁신위를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
(현재는 금융위원장 단독) ※ 「금융혁신법」 개정사항

○ 혁신위는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이 가능토록 금융위원장의 참여는 가급적 제한

[유사사례]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영

- ① 금융위원장과 ② 민간위원 중 호선 1명, 총 두 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직 수행
- 실제 공자위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자율적 토론·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위원장 주재로 진행

※ 혁신금융서비스 최종 지정은 금융위 논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만큼, 혁신위는 민간부문의 1차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 운용

② 혁신소위(정식 혁신위 전 예비검토) 심사 내실화

○ 소위원회를 두 개 분과(자본국 / 산업국·혁신국 소관)로 나누어 각 분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밀도 있는 심사 추진

* 현재는 민간위원 전체(15명)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위원회에서 모든 안건 검토하여 효율적·집중적 안전검토가 어려움

② “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” 설치

◆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신속·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전문가 지원단 구성

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건의 예비 검토를 위한 「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(‘전문가지원단’)」 설치·운영 (핀테크지원센터 內)

○ 법률·특허전문가, 금결원·금보원·신정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,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되, 전문가 자격요건 설정

※ 전문가 지원단 자격요건(안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가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
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
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
- 라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

2.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

※ 현행 규정상 심사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의 근거는 마련(「혁신위운영 규정」 §10)되어 있으며,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지원단 조직을 기운영 중

□ ‘전문가 지원단’은 실무단 검토 전에 혁신금융 신청서를 분석하고 사업구조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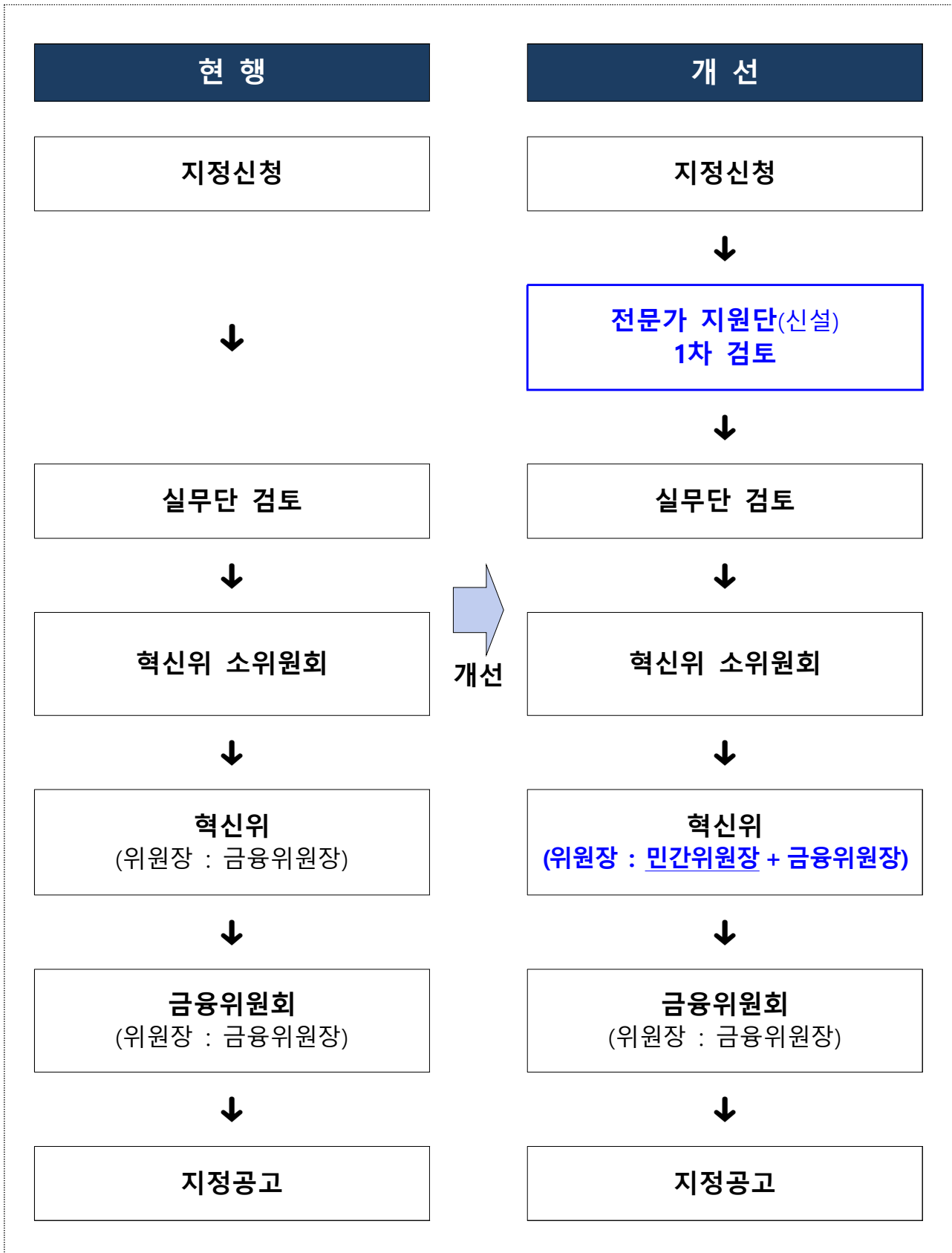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심사기준 중 기술적·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“혁신성”·“소비자 편익”·“시장 영향” 등을 중점 검토

- 전문가는 해당분야 전문성에 기반하되, 필요시 유관기관·연구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심사 후 실무단에 의견서 제출

※ 전문가 지원단은 전문성과 심사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에 대한 밀착 멘토링 지원 역할도 수행 (☞ 11p)

별첨 1

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개선



③ 심사기준 명확화

◆ 특례 조치의 핵심 근거가 되는 ‘혁신성’, ‘소비자편익’ 요건을 보다 구체화

① “혁신성” 심사기준 명확화

○ 다양한 서비스가 테스트될 수 있도록 ‘혁신성’ 기준을 넓게 인정

*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내용·방식·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여 해석

○ 동일·유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청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‘혁신성’을 인정하되,

- 최초 신청한 1개사에게만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·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예외 허용*

* ① 제도개선 예정시(→ 혁신서비스 지정은 ‘특정 사업자’에 대한 ‘규제 특례’보다는 제도 개선 이전까지의 ‘임시허가’적 성격)

② 다수 사업자가 동시에 신청하여 최초 아이디어 착안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

③ 시장성·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다수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결과가 필요한 경우

④ 다수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빠른 확산이 필요한 경우 등

➔ 동일·유사 서비스 허용시, 혁신위에 우선 상정(Fast track)하고 심사기간 단축

② “소비자 편익” 심사 내실화

○ ‘소비자 편익’ 심사기준이 추상적·관념적으로 중요 심사요인으로 활용되지 못함

*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상의 소비자편익 요건 심사기준 :

① 서비스 품질 개선, ② 비용절감 및 소비자 수익증대, ③ 금융시장내 경쟁 촉진 기여

○ ‘소비자 편익’과 ‘리스크’ 평가 사이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분석, 사례 등을 기초로 평가

2.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

① 만기도래 관련 불확실성 완화

◆ 시장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특례 종료 이후 처리 방향을 조기 확정·통보하고, 사업종단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

①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제도화(규제개선) 여부 조기 확정·통보

○ 혁신위·금융위는 **만기도래 3개월전**까지 제도화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

- 제도화 추진시 규정개정 내용, 추진 일정 등을 상세 통보하고,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유를 함께 통보

※ 혁신금융사업자는 사업지속 필요성 및 안정성 등 제도화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*를 만기도래 6개월전까지 제출 가능 (사업자 요청시 보완기간 부여)

* 사업운영성과, 소비자피해 및 민원 등 분쟁발생 사례, 향후 사업운영 계획 등

② 사업종료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

○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, 사업자는 자체적인 ‘사업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’을 제출 → 지정 심사시 실질 심사

- 불가피하게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피해 및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자산 이관, 자산정리, 분쟁발생시 대응 방안 등 구체적 적시

* 현행 규정도 사업종료시 소비자보호 계획을 제출토록 「금융혁신법 §13④」하고 있으나,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경향

② 특례 범위 합리화

◆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특례의 범위를 제한하되, 테스트 경과에 따라 위험 수준에 맞는 신속한 규제 완화 추진

①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단계에서는, 특례범위 제한

○ **[규모]** 총 거래규모를 전체 시장규모 대비 일정 비율내 제한

- 비율 제한이 어려운 경우* 서비스 규모의 지나친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** 병행

* 예) 신규서비스로서 관련시장 미형성, 일정수준 이상 테스트 규모 확보 필요 등

** 예) 고객 1인당 거래규모, 전체 고객수·서비스취급액 제한 등

※ 해외사례

- ▶ (영국)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 내로 제한
- ▶ (호주) 핀테크 인가 면제를 통한 시험사업시 고객 수(100명), 고객당 거래금액(예금 A\$1만, 여신 A\$ 2만5천, 손해보험 A\$ 5만) 총 거래금액(A\$500만) 한도 존재

○ **[기간]** 시장 테스트를 위한 적정기간 부여 (법상 최대기간 지정 관행 지양)

※ 해외사례

- ▶ (영국) 3~6개월간 테스트 진행, 실증 도중 서비스 종료 대비 출구전략 요구
- ▶ (호주) 최대 24개월, 테스트 종료까지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서비스 중단

② 서비스 출시 이후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사업화 신속 지원

○ 사업자가 서비스 범위 확대, 부가조건 완화·폐지 등 요청시 신속 심사하고, 안정성 입증시 만기도래 전이라도 신속한 제도화 추진

※ 혁신위 운영시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 및 규제개선(제도화) 요청 안건은 우선 상정(fast track)하고 신속 심사

3. 지원 체계 재편

① 중소·예비 핀테크 집중 지원

◆ 중소·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느끼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체계 마련 ※ 사업추진 단계별 핀테크 애로사항 (☞ p13)

①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“책임자 지정제” 운용

-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사업자의 경우 핀테크지원센터 內 멘토 풀 (사업·법률·회계 전문가 등 100명 내외)에서 지정
 - 금융서비스 프로세스 및 규제체계, 기획·개발·회계·세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등 종합 제공
-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인 경우 ‘전문가 지원단’ 중 지정하여 보다 구체적 컨설팅 제공 (예비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지정)
 - 신청서 작성,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응,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 및 고도화 단계까지 사업추진 쏠 단계 밀착 지원
 - 특히, 당초 안대로 수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디어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모델 변경·보완 등 재추진을 적극 지원

<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단계별 전담 전문가(“책임자”) 역할 >

예비신청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청서 컨설팅 (사업내용 구체화, 특례법령 확인, 법률용어 수정 등) · 사업모델 변경·보완 컨설팅 (당초 사업모델이 수용 불가의 경우)
혁신서비스 심사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위·금감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지원
혁신서비스 지정 이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금융사·유관기관 협조 및 제휴 지원 · 출시 후 서비스 고도화 지원

②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구축

- 현재 연 1회 행사 성격으로 추진되는 D-테스트베드*를 “상시적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”으로 확대·개편
 - * 연1회 일부 참여팀을 모집하여 금융데이터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제공하고 테스트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·표창 (‘21년 시범도입)
- 누구든지 필요한 시점에 아이디어의 사업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「데이터」 + 「분석도구」 제공 (핀테크지원센터 內 시스템 구축)
- 제공 데이터는 금융권 데이터 외에도 비금융데이터(통신·유통 등) 등으로 지속 확대·보강, 필요시 데이터분석 전문인력의 멘토링 제공

②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성 확보

◆ 규제특례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출시·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

- 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사업자의 자체성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반기별로 계획 대비 운영성과 점검 (상세양식 마련·제공 예정)
 - * 영국사례 :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규제당국에 매주 진행보고서를 제출
- ☐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, 기간 연장·제도화 요청시 불이익,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등 검토
 - * 「금융혁신법」 제7조① :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가능
- ☐ 불가피한 사유 없는 서비스 개발 지연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, 지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

1. 아이디어 발굴 · 구체화 단계

- ☐ 금융서비스 세부 프로세스 및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아이디어 발굴에 한계, 통계·데이터 부족 등으로 사업성 검증이 어려움

- ▶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
- ▶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
- ▶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,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

2.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· 지정 단계

- ☐ 심사요건·규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신청서 작성에 애로
⇒ 부실한 신청서로 인해 실무단에서도 신속한 검토에 지장

- ▶ 신청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찾지 못하는 등 신청서 내용 부실
- ▶ 개발중인 금융서비스가 해도 되는 행위인지 아닌지조차 모른 채 사업화를 진행

- ☐ 예비 신청서 제출 이후 피드백이 느리고, 수용 불가시에도 구체적인 불가 사유를 알 수 없어 사업모델 변경, 재추진 등 대응이 어려움

- ▶ 예비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이후 검토 결과 회신이 지연 (평균 9~12개월)
- ▶ 수요조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소통이 어려움
- ▶ 기업이 신청한 신청 건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어 불만 증대

3.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단계

- ☐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정 이후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은 부재

- ▶ 금융회사와 협조지연, 개발과정에서의 법률이슈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출시 지연되나 관련 컨설팅 부재
- ▶ 혁신금융서비스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출시 지연

IV. 향후 추진일정

- 신청서·매뉴얼 개정사항 등은 '22.4분기 안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 추진
- 법 개정 사항은 금년 중 개정안 마련 및 '23년중 국회 제출을 추진, 법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 취지에 맞게 제도 운영

과 제	후속조치	추진일정
① 심사 체계 개편		
① 혁신위 구성·운영 개선 1) 공동위원장 체계 개편 2) 혁신위 소위 운영방식 변경	금융혁신법 개정 운영방식 변경	'22.4분기~ '22.4분기
② "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" 설치	혁신금융전문가지원단 구성	'22.4분기중
③ 심사기준 명확화 1) 혁신성 심사 기준 구체화 2) 소비자 편익 심사 내실화	「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」 변경 「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」 변경	'22.4분기 '22.4분기
② 제도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		
① 만기도래 관련 불확실성 완화 1) 만기도래 전 제도화 확정 2) 사업종료계획서 의무 제출	혁신금융사업자별 통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변경	즉시 추진 '22.4분기~
② 특례 범위 합리화	「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」 변경	'22.4분기
③ 지원 체계 재편		
① 중소·예비 핀테크 집중 지원 1) 책임자 지정제 운용 2) D-테스트베드 상시화	운용 규정 마련 상시 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	'23년~ '23년중
②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성 확보 1) 사업자 자체성과계획서 제출 2) 지원금 회수 절차 마련	혁신위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회수 규정·절차 마련	'22.4분기중 '22.4분기

참고 1

주요 혁신금융서비스 사례

- **(대출비교서비스)** 약 870만명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상품을 조회하고, 총 185만건, 15조 7,312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약 396억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*(추정) 발생

* 플랫폼 제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'21.9월 기준 대출잔액을 이용하여 추정
(\sum 회사별 대출잔액*우대금리)

- **(해외주식소수점 투자)** 약 86만명이 총 2조 7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, '21년 월평균 거래금액은 '20년 대비 약 2배* 증가하고 투자가능 종목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투자자 선택권 확대

* 월평균 거래금액 : ('20년) 737억원 → ('21년) 1,363억원, 626억원 ↑ (84.9%)
투자가능 종목수 : 264개 (지정시) → 519개 ('21.12말), 225개 ↑ (96.6%)

- **(신용카드가맹점 O2O 결제)**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원비 비대면 카드 결제가 증가하여 약 130만명이 총 2,753억원 결제

* 월평균 이용금액 : ('20년) 120억원 → ('21년) 239억원, 119억원 ↑ (99.2%)

- **(대안 신용평가)** 전자상거래 데이터 등 대체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개인사업자 등에게 총 1,991억원의 대출실행을 지원

- **(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)**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후 결제월에 상환하는 서비스로 약 11만명이 총 85만2천건(787억원) 이용

- **(신용카드없는 후불결제)**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대안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카드 없이 후불결제 및 소액신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 19만명이 총 331억원을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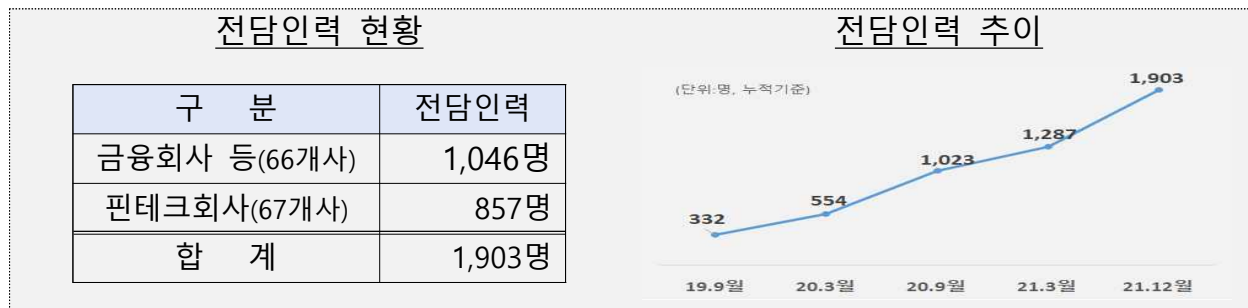
- **(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)**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는 서비스로 약 25만명이 13개사의 서비스 이용

참고 2

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고용증가 및 투자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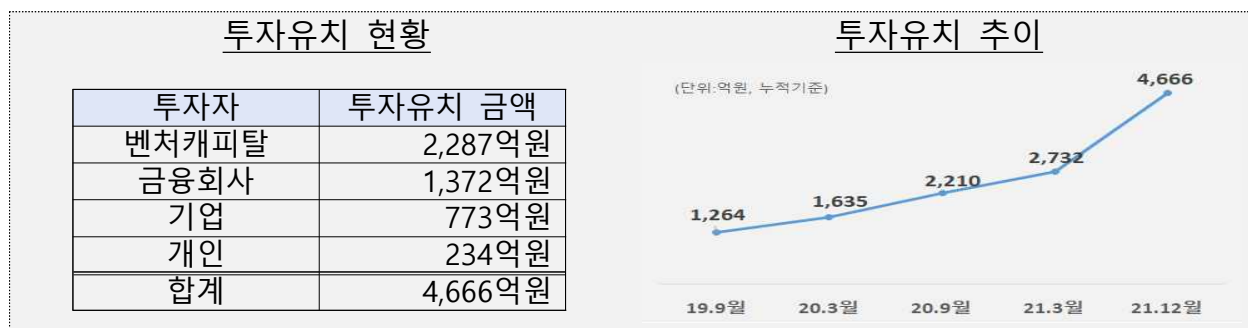
고용증가

- '21.12월말 누적 기준으로 133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1,903여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으며 전담인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- 핀테크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다양한 혁신서비스의 발판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



투자유치

- 혁신금융사업자 중 40개 핀테크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일 이후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4,666억원*의 신규 투자를 유치
- *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큰 핀테크회사(예 : 비바리퍼블리카, 카카오페이 등)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
- 이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기업들이 있으며, 동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줌



참고 3

규제개선 완료 혁신금융서비스

번호	서비스명	규제개선 내용	시기
1	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금융투자상품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* 유권해석 	'22.7월
2	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매출채권팩토링을 포함 * 「신용보증기금법」 개정 	'21.12월
3	신용카드 단말기 없는 스마트폰 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스마트폰 단독 단말기(소프트웨어 단말기) 인증기준 마련 * 여신금융협회 「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한 단말기 시험 가이드」 개정 	'21.12월
4	모바일 환전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간 거래방법 제한 완화 *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 	'20.10월
5	은행 지점 방문 없는 환전, 현금인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항공사·면세점·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 신청·수령이 가능하도록 은행의 환전사무 위·수탁을 허용 *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('20.10.30.개정·시행) 	'20.10월
6	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송금 중개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핀테크기업도 다른 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 *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 	'20.10월
7	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의, 발행·유통,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* 「지역사랑상품권법」 제정 	'20.5월
8	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험상품 등의 자문이 가능한 '금융상품자문업자' 도입 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	'20.3월
9	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온라인을 통한 대출상품중개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주의에 대한 예외를 허용 *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정 	'20.3월
10	통신·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,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확대 등 * 「신용정보법」 개정 	'20.2월
11	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명정보를 결합·분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* 「신용정보법」 개정 	'20.2월